

광주의회,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 제동

학교법인 흥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의 혁신학교 지정 문제에 대해 일부 동문과 교사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자)는 전남 소속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 "대광여고 혁신학교 추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문위는 이같은 뜻을 시교육청 측에 전달하고, "(혁신학교 지정 문제는) 의회와 먼저 충분히 협의한 뒤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기 위해 최근 3년간 광주지역 혁신학교 추진 현황 자료

교문위 "명분 있더라도 절차상 공정해야" "의회와 협의 먼저" 지정작업 중단 요구

일체를 요구했다.

교문위 소속 한 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운영위원회 결정 과정, 구성원 범위 등을 놓고도 뒷말들이 많아 일단 지정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고, 앞서 추진된 혁신학교들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문위는 다음달 6일 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교문위는 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의 외에도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소통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동문과 학부모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등을 만나 혁신학교 전환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사항 등을 알리며 지정 강행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그동안 혁신학교 전환 여부를 놓고 포괄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급식종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그것도 사립에서는 혁신학교로의 전환이 녹록치 않고, 선행해야 할 교사 충원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반기를 들었다.

이에 시 교육청과 학교 측은 "대광여고의 경우 광주지역 고교 중 유일하게 급식실과 운동장이 없고 교육과정도 일반적 강의를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학교를 추진하게 됐다"며 "혁신학교가 되면 성적이 떨어지지는 건 오히려"라는 입장이다.

서은홍 기자

이탈리아 북부, 가뭄·매연에 대기오염 '비상'

이탈리아 북부에서 최근 가뭄과 매연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시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토리노 시 정부의 환경청은 25일(현지시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00㎍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 100㎍은 전 세계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들의 연 평균 미세먼지 농도이다.

북부도시 밀라노의 쥐세페 살라 시장은 이날 설명에서 전기차, 자전거, 카셰어링(차를 예약해 자신의 현 위치에서 가까운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 등 대중교통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C40 Cities)에 참석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들과 2030년까지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호주 역외난민수용소 마누섬 긴장 고조

호주 역외난민수용소 중 하나인 파푸아뉴기니 마누섬의 난민수용소의 폐쇄일이 다가오자 수용소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찰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영국BBC에 따르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에 억류돼 있는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마누섬과 나우루에 각각 역외난민수용소를 운영 중이다. 마누섬 내 난민수용소는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다음주에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주는 인근 도시에 난민 약 600명이 머물 숙박시설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호주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난민들이 미국, 캄보디아로 이주를 신청하거나 나우루 수용소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들은 대체 거주지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호주당국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마누섬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난달 우리가 섬을 찾았을 때 막대기, 돌, 칼을 든 현지 남성들이 종종 찾아와 난민들을 공격했다. 난민들은 현지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폭력과 강도를 당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들은 마누섬 난민수용소가 폐쇄된 후 막무가내의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난민들호주는 마누섬 섬 당국이 범죄를 예방하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난민기구는 호주 마누섬의 난민수용소 폐쇄가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질랜드, 해외투자자 기준주택 구입 금지

해외 투자자들의 계속되는 주택 구입으로 가격이 치솟는 등 자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자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택 구입을 금지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재선된 아던 뉴질랜드 신임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투자로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질랜드는 중국과 호주, 여타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최종목적지로 알려져 있다. 북핵 위기와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 위험, 사회 불안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더욱이 뉴질랜드는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인 격변과 갈등으로부터 먼 곳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결제 서비스 페이팔의 공동 투자자이자 페이스북의 이사진 피터 틸은 뉴질랜드에 자산을 구입한 바 있다.

투자전문가인 조지 소로스도 창립한 신경제사연구연구소의 로버트 존슨 소장은 "전 세계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뉴질랜드와 같은 곳에 농장을 구매한다"며 "그들 스스로 도망갈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구입한 뉴질랜드 토지의 면적은 4658.63km에 달한다. 이는 뉴질랜드 농경지의 3.2%에 해당한다. 구매자들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고 다음은 호주인이었다. 영국인, 미국인, 홍콩인 또한 뉴질랜드 내 주택·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뉴질랜드인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낀다. 현재 뉴질랜드 상인의 4분의 일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 영·호남 수협 홍보비 '하늘과 땅'

수협중앙회가 김인권 회장 취임 이후 특정지역 언론으로 홍보비 집행이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고흥 보성 정홍 강진)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호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0원인 반면, 영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문재인 대통령 축하광고를 포함해 1억1800만원이나 된다.

현 회장 취임 전후 영호남 홍보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현 회장 취임 전(2013년~2015년 2월) 영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2080만원, 같은 기간 호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810만원이다.

차이가 있지만, 현 회장 취임 이후에는 더욱더 격차가 커졌다.

김 회장 취임 이후 2년 5개월(2017년 7월) 동안 집행된 영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1억 6810만원, 같은 기간 호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440만원에 불과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 광고는 내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 광고는 수산전문지 9건에 900만원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는 영남지역 일간지 2건, 200만원과 전문지 5건 500만원으로 총 2700만원을 집행해 3배에 달했다.

황 의원은 "수협은 영남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1원 한 장도 어업인을 위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화꽃 앞에서 26일 경남 기창군 신원면 기창사건추모공원에 활짝 핀 국화꽃 앞에서 승복을 입은 비구니스님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소음피해 소송 변론 종결

오는 12월7일 선고 예정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야구장 소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26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8명(애초 732명)이 야구장 신설에 따른 빛·소음공해·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가졌다.

주민 대표는 "이 같은 피해는 주거 지역 한복판에 야구장이 건설되면서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며 "소송까지 힘든

시간이었다. 상생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가 (피해 예방을 위한)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KIA 타이거즈 측 변호인은 "국내 최초 사안으로 법률상 구체적 기준이 없다. 야구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은 자연적 기능이다. 소음에 대한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빛 공해와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수인한도)의 입증에 없다.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첫 재판이 시작된 뒤 법원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지를 찾아 관련 피해 감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주민 1명 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으로 시작됐다.

이후 거주 기간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증액되면서 단독에서 합의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선고는 오는 12월7일 오후 1시50분으로 예정돼 있다.

광주 북구 옛 무등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국비 298억 원·시비 396억 원·기아차 300억 원 모두 994억원 을 투입, 2014년 3월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5만7646㎡ 규모로 개장했다. 경기장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주춘정 기자

큰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